

■ 사회 ■

김도균(충남대)

■ 발표 ■

장수찬(목원대)

로컬 거버넌스의 현재와 민주주의의 진화

로컬 거버넌스의 현재와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

장수찬 (목원대학교)

1장

로컬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1. 한국사회의 변화 (욕구의 변화)와 민주주의
2. 외국의 로컬 거버넌스와 대의 민주주의
3. 한국 로컬 거버넌스의 핵심문제

목차 contents



2장

로컬 거버넌스의 현황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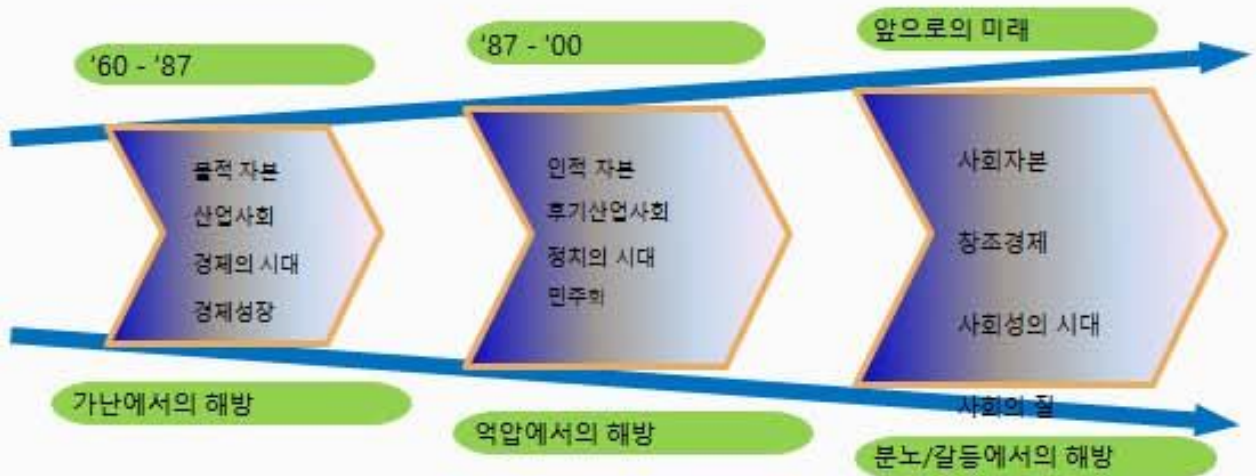
1. 민관협치 구성요소: 정보공유, 정책협의, 참여와결정
2. 정보공유 수준
3. 정책협의 수준
4. 참여적 결정 수준

3장

민관협치의 실례: 마을 만들기민관협치 수준

1. 마을섹터 민관협치
2. 6개의 기본 제도적 인프라
3. 제도적 준비와 시민적 역량
4. 앞으로 남은 과제는?

한국사회의 메가트렌드 (Social Mega Trend)



지방정부의 역할 변천

	규제자	서비스 공급자	지역 발전자
변천	합법성, 균등성, 공공집서	소비자만족, 효율성, 경쟁	사회적 응집력, 참여, 소유
목적	국가, 정부	시장, 계약	네트워크, 참여
매개체	법률적 이해	경제적 이해	정치적 이해
논의유형	Government 계층제+법률중심 지방정부: 유일독점제		Governance 여러 사회 집단의 수평적 협력, 지방정부: 단지 주요 역할

Plumptre, T. & Graham (2000)

정부내 민주주의 제도 요인

- 정보공개
- 주민 예산참여
- 주민 정책 평가
- 정책 선호 전달 통로 구축
- 소수자 차별 금지
- 주민 감사 체계
- 윤라인 참여
- 모니터링 제도

리더십 및 정부역량

- 정책 결정 및 실행 과정의 융복합성
- 사회 경제적 행위자의 정책적 상달
- 정부 내외부자들과의 소통
- 내부 정책 모니터링 시스템
- 선출직 공직자의 리더십
- 정책 집행의 전문성
- 외부 환경 적응 능력
- 정부조직 혁신 역량

로컬 거버넌스 영향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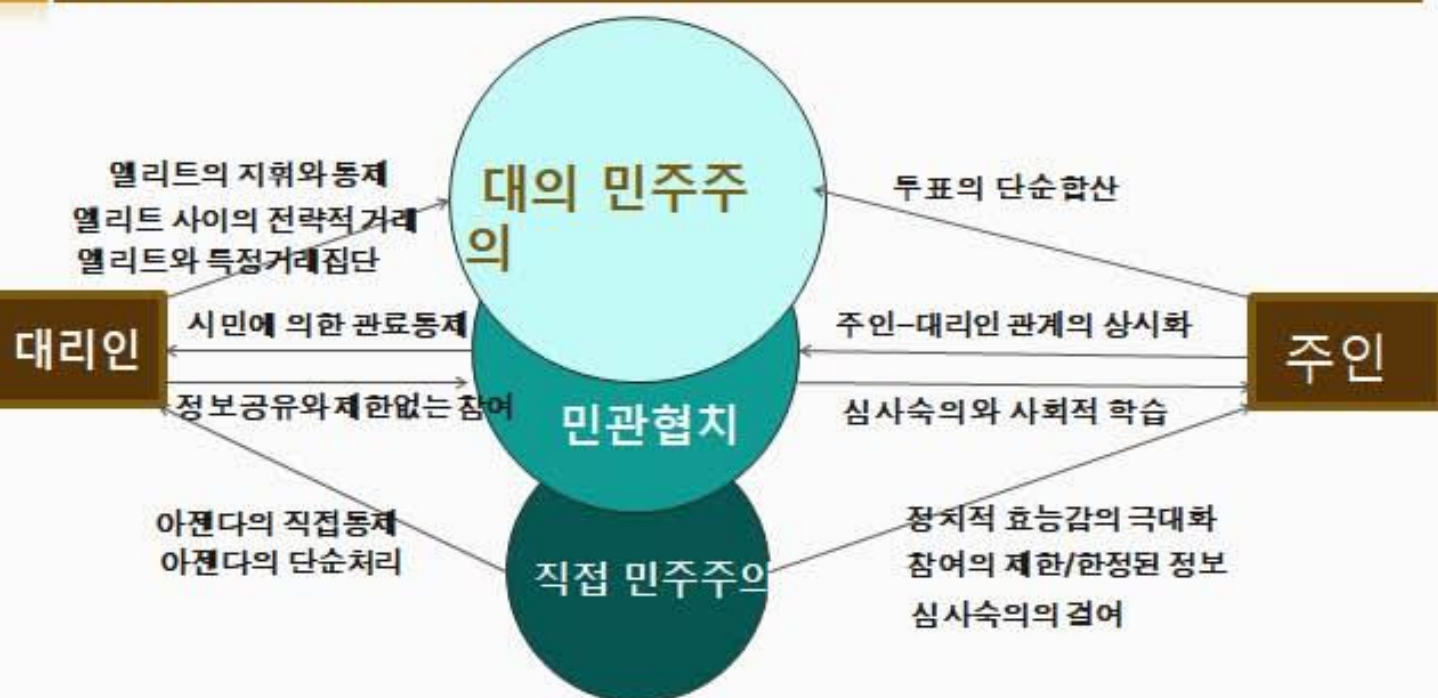
시민사회 역량 요인

- 비정부 행위자 참여
- 시민의 지식정보 능력
- 정치 행동 조직 경험
- 전문적 정책 대안 제시 능력
- 공동 행동의 책임성
- 특정계층, 이해당사자, 일반 시민을 대표하는 체계 구축
- 이익집단의 조직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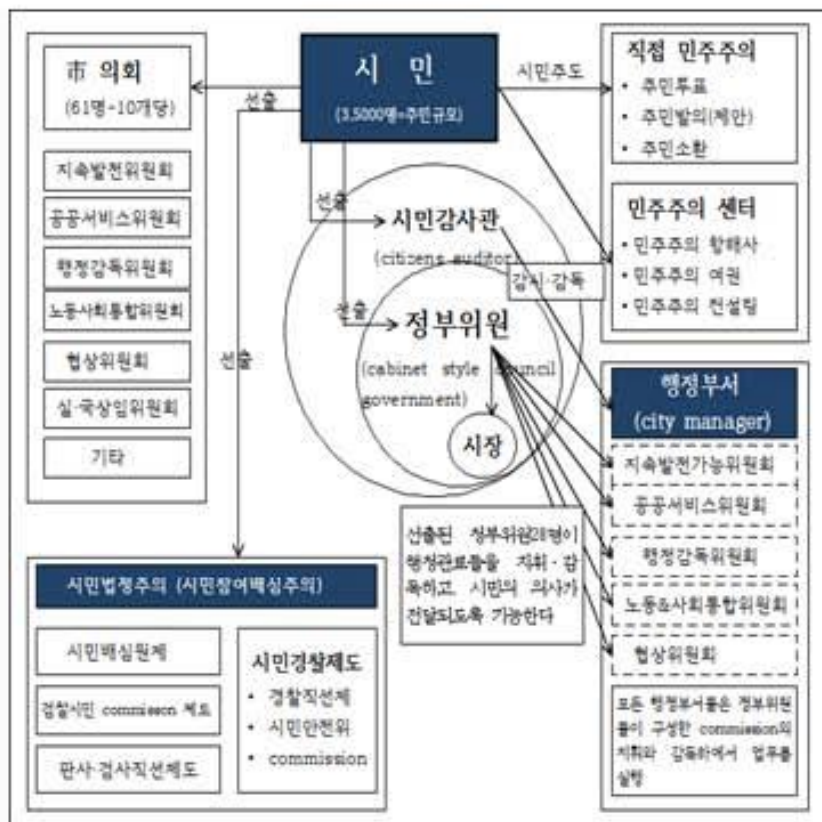
정치사회적 환경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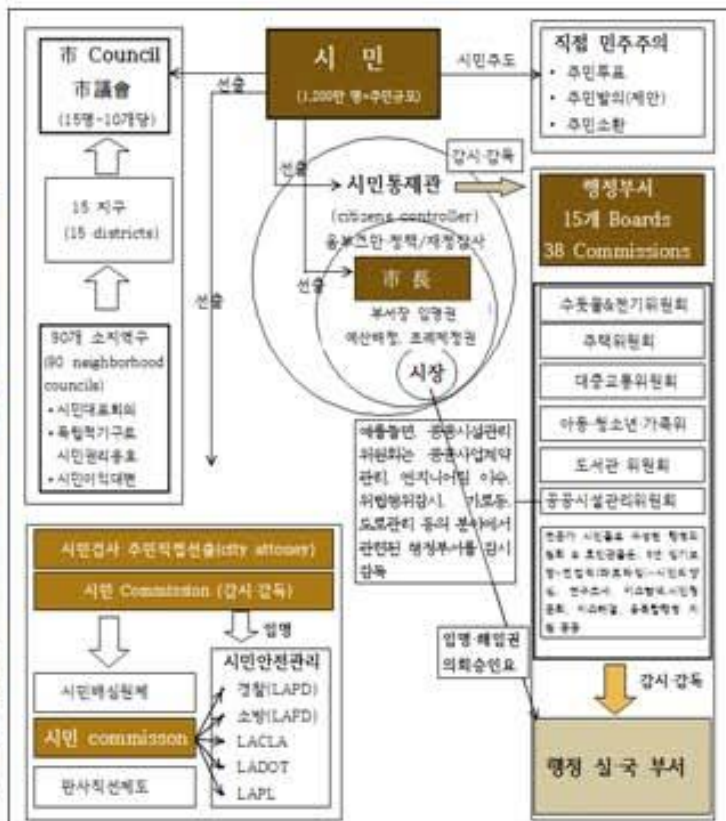
- 의회의 감시능력
- 의회의 주민 대표성
- 의회의 예산 심의
- 의회의 감사권
- 지방 언론의 역량
- 지방 언론의 독립성
- 정당 내 민주주의
- 시민사회와 정당 결합
- 정당의 시민사회 이익 반영

민주주의와 민관협치의 역할



스웨덴 팔룬시와 민주주의·민관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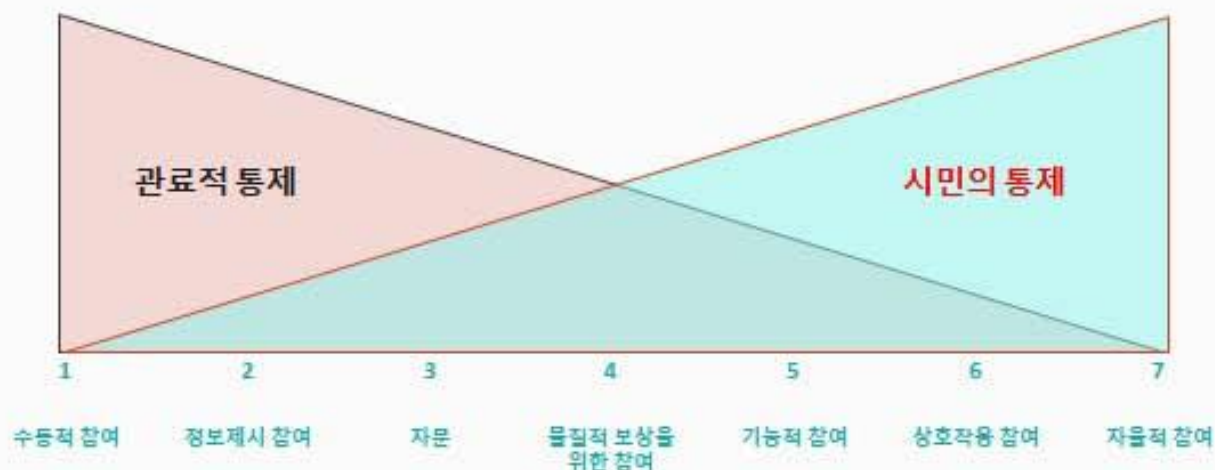
8	시민의 통제(citizen control)
7	권한 위임(delegated power)
6	파트너십(partnership)
5	회유(placation): 위탁과 달래기
4	상담(consulting)
3	정보제공(informing)
2	자료(therapy)
1	주민 조종(manipulation)

실질적 참여

← 형식적 참여

동원참여/비참여

시민의 자치역량과 거버넌스: 주민참여수준



정부 및 기관신뢰수준(2015)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한국인의 사회적 참여 (유형과 참여수준)

2015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2 참여

>> 사회단체참여(계속)

		2013년	2014년	2015년
정당		2.0%	2.2%	1.6%
노동조합단체, 사업자단체, 직업조합		3.1%	3.1%	3.0%
종교단체		17.9%	18.2%	17.7%
동호회		19.8%	23.6%	20.0%
시민운동단체		2.4%	2.4%	2.2%
지역사회 공공모임		11.9%	7.7%	7.8%
동창회, 향우회		34.6%	36.5%	31.3%

한국 거버넌스 수준 비교: 민주주의 & 정치적 책임



스웨덴

Unde omnis iste natus error sit voluptatem accusantium doloremque laudantium, totam rem aperiam, eaque ipsa quae ab illo inventore veritatis et quasi architecto beatae vitae dicta sunt explicabo. Nemo enim ipsam voluptatem quia voluptas sit aspernatur aut odit aut fugit, sed quia consequuntur magni dolores eos qui rati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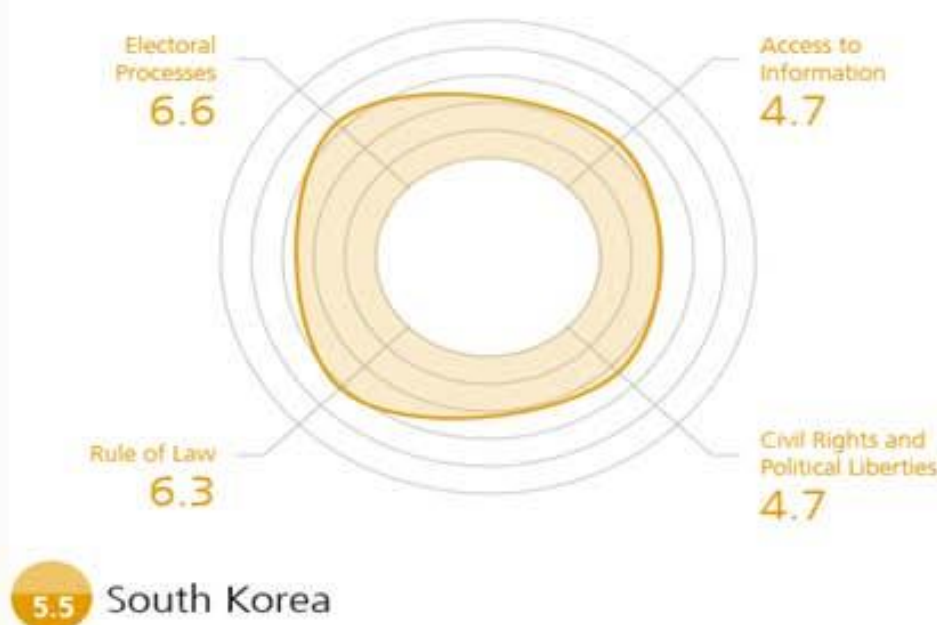
한국

Unde omnis iste natus error sit voluptatem accusantium doloremque laudantium, totam rem aperiam, eaque ipsa quae ab illo inventore veritatis et quasi architecto beatae vitae dicta sunt explicabo. Nemo enim ipsam voluptatem quia voluptas sit aspernatur aut odit aut fugit, sed quia consequuntur magni dolores eos qui ratione

미국

Unde omnis iste natus error sit voluptatem accusantium doloremque laudantium, totam rem aperiam, eaque ipsa quae ab illo inventore veritatis et quasi architecto beatae vitae dicta sunt explicabo. Nemo enim ipsam voluptatem quia voluptas sit aspernatur aut odit aut fugit, sed quia consequuntur magni dolores eos qui ratione

한국 민주주의 질에 대한 평가 (OECD, SGI Quality of Democracy, 2016)



다양한 민주주의의 유형과 정의

DEMO (PEOPLE) + CRACY (GOVERN) = PEOPLES' RULE, 인민에 의한 통치

◆ 실질적민주주의

Rueschmeyer & Stephens

1. 국가권력에 대한 접근성이 모든 계급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는 민주주의
2. 국가권력을 이용한 부의 분배가 진척되는 사회
3. 정치참여의 수준이 계급 간에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국가권력을 지배계급이 독점할 수 없는 사회
4. 권위주의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던 이해집단이 완전히 해소되고 국가가 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상태

◆ 효과적민주주의(참여)

Inglehart & Welzel

사회구성원들이 정치적 자기표현을 중요하게 여기고 참여를 확대하고, 엘리트들에 대한 도전이 일반화하는 단계

1. 엘리트의 부패가 현저히 주는 단계
2. 엘리트 과두정치가 해소되고 공공정책과정에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단계
3. 시민들의 엘리트들에 대한 도전적 정치행위들(청원, 시위, 연좌, 보이콧 등)이 일반화하는 단계
4. 시민이 조직화되어 엘리트들에 대한 힘의 균형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상태

◆ 절차적민주주의

Freedom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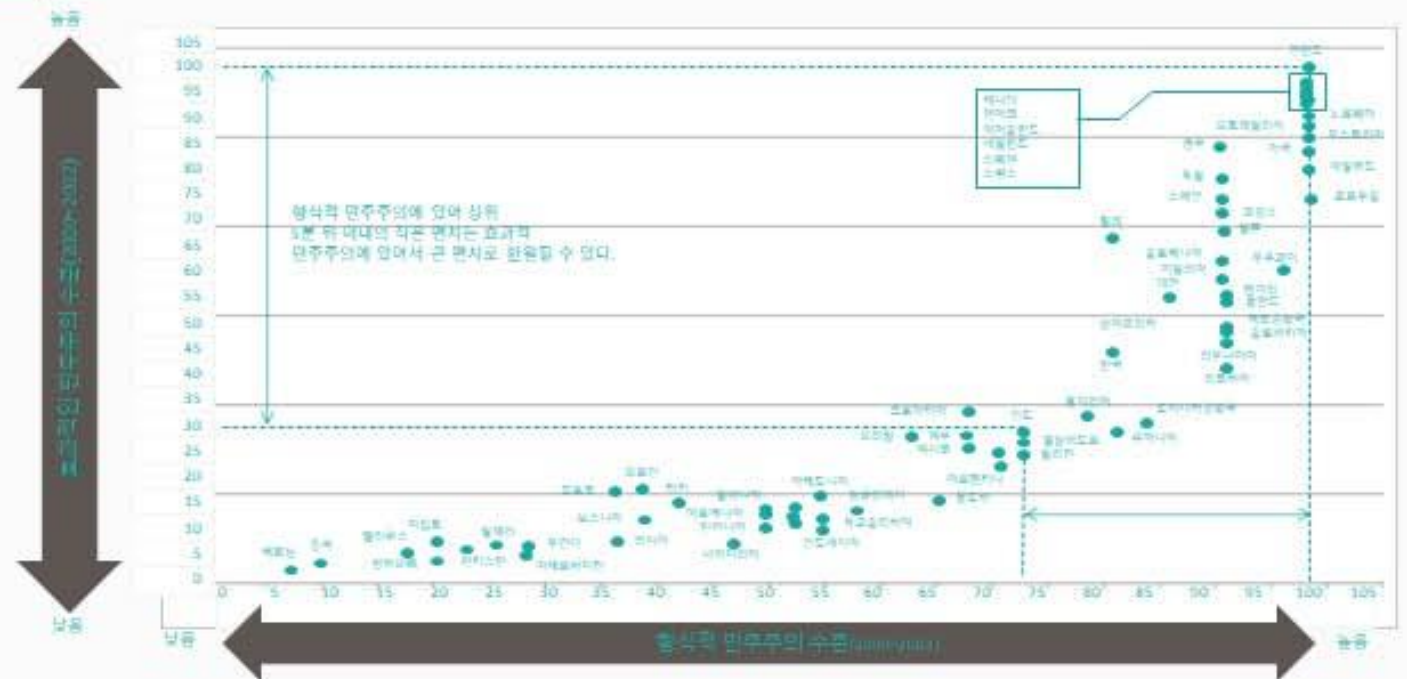
1. 정치적권한
 - 국가 수장, 입법부 의원들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 공정한 선거법, 선거 때만 기회 균등하게 보장, 공정한 투표/개표 및 집계
 - 유권자들의 공직자들에 대한 권한 이양
2. 시민적자유
 - 언론, 출판, 결사, 집회, 표현의 자유
 - 정보 획득의 자유
 - 사상과 신념의 자유
 - 정치적 공표와 수감으로 부터의 자유
 - 재산권, 여행, 주거선택, 결혼과 가족권에 대한 자유
 -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의 자유
 - 정부의 차별과 부패로부터의 자유

◆ 최소민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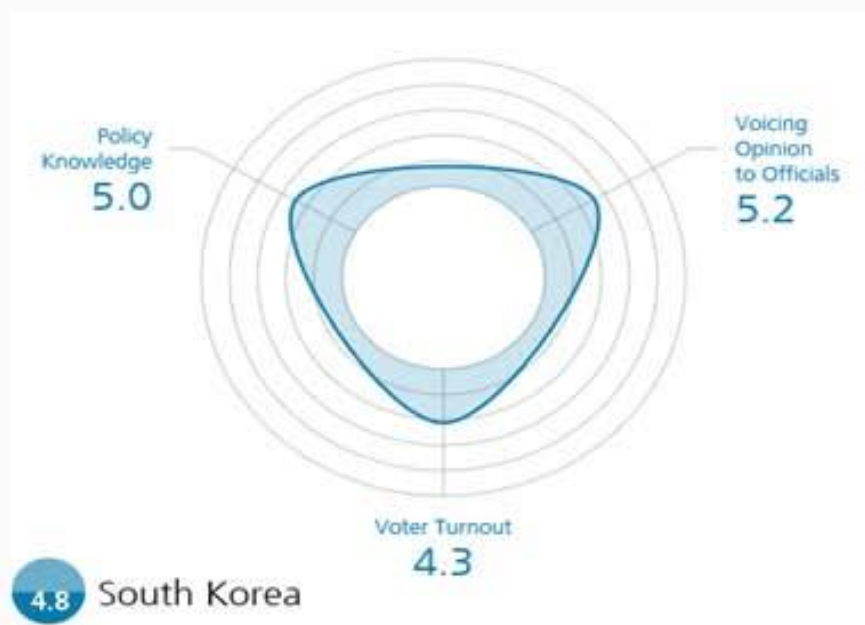
Joseph Schumpeter & Samuel Huntington

1. 자유롭고 공평하고 투명한 선거과정의 존
2. 모든 정당과 정파가 선거과정에서 자유롭게 참여

1-1. 민주주의단계:절차적 vs 효과적인 민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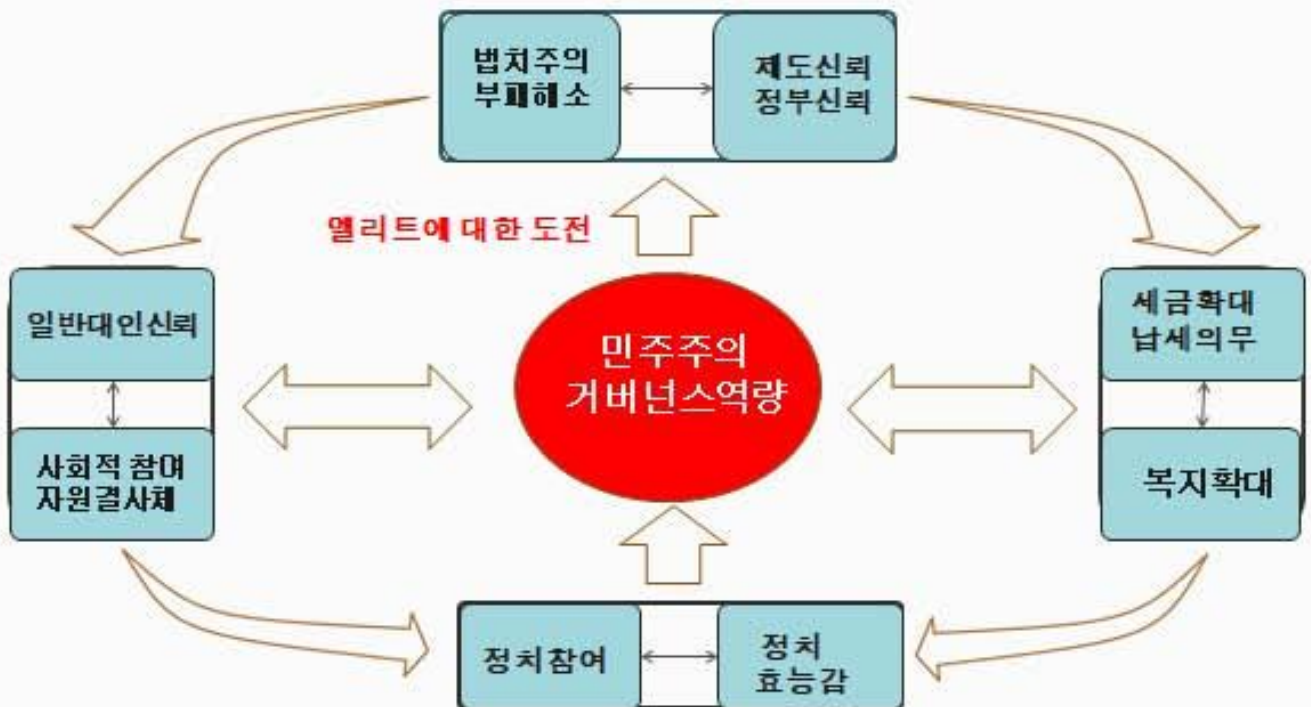


한국민주주의 질(시민의 정부에 대한 영향력 평가) OECD SGI Democracy index 2016



정부정책입안과정에서 정부가 민간주요행위자와 어느 정도 정책협의를 진행하는가?

(OECD SGI 지수측정, 2016):
Greece(3), Finland(9), Netherland(9)



OECD 성공적인 민관협치를 위한 10계명

리더십의 민관협치에 대한 결단(선출직 공직자와 간부의 인식변화)

시민의 정보취득,정책상담, 참여권한을 인정

민관협치의 목표와 한계를 초기에 분명히(지나친 기대감은 금물)

정책상담과 참여는 정책형성 초기부터

공평한 참여기회 보장(소수약자의 정치적 기회보장)

재정적,인적,기술적 지원보장 (예산, 평가, 인사지원)

정책조정 및 조율-조정기능강화, 네트워크확대,지속적인 행정혁신

정치적 책임(Accountability)과 권한을 분명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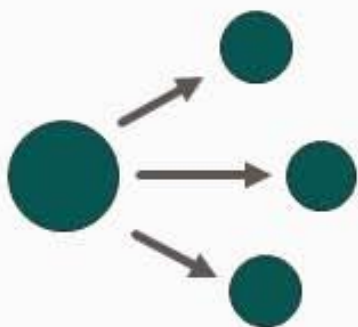
평가(Evaluation):시민참여적 평가방식

적극적인 시민(Active citizenship): 시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실행

민관협치의 3가지 기본요소와 방식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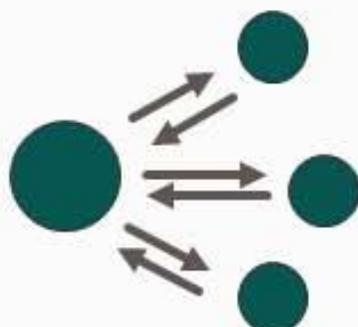
시민참여유형		방 법
정보(information)	수동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보 • 정보관리 시스템 소책자 안내서 교육교재 • 정부 웹사이트와 포털 사이트
	능동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라디오, 인쇄물,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 쌍방향 미디어 SNS
협의(consultation)	피드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분식, 시민접촉을 위한 이메일 (대면메일링) • 전화서비스 정보센터
	피드백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론조사 온라인 채팅 • 협의지침 공청회 • 시민패널 세미나 및 워크숍 • 자문위원회, 심사평가조정위원회 • 포커스그룹
적극적 참여 (active participation) / 공동의 결정 (co-decision)	정부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조민 제도, 정책 모니터링제도 • 규제교섭모델, 온라인 토론그룹 • 시민패널원 (citizen jury),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 타운 홀 미팅(townhall Meeting), 주민 참여예산제
	시민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회의 독자적 시민포럼 • 독립적인 웹사이트, 온라인 채팅그룹, 메일링리스트 •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정보공개, 정책협의, 적극적 참여결정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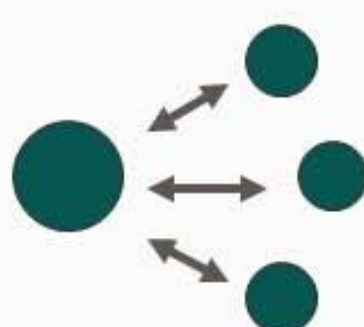
정보공유

one-way relation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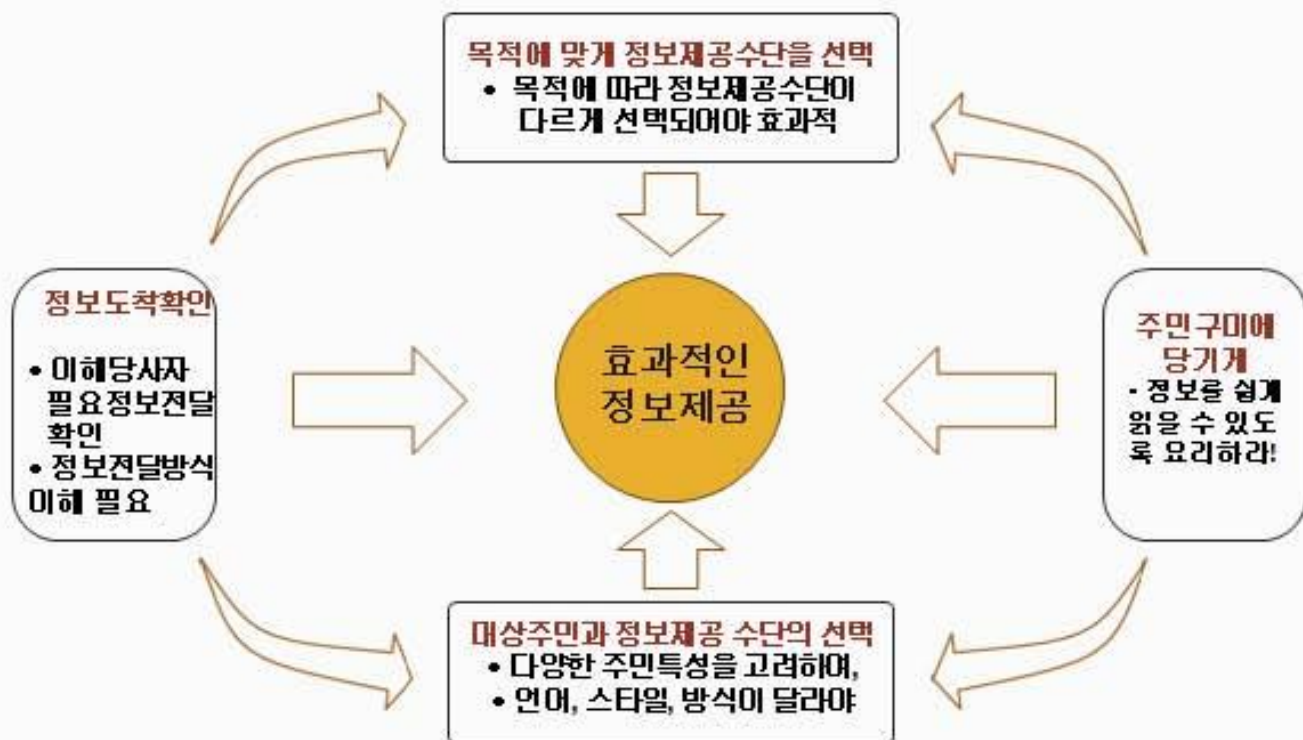
정책협의

two-way relationship



적극적 참여&결정

relationship based on partnership



참여제도1: 정보공개제도

광역시도별 정보공개 종합측정(2013)

	정보공개 원칙	청구의 수월성	전자식 공개 기반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규정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사전공개 사후공개	그 외 사항	종합점수
서울특별시	적극적 수동적	4점	4점	4점	5점	사전공개 (정례적)	3점	20
인천광역시	적극적 수동적	4점	4점	4점	4점	사전공개 (정기적)	3점	19
대전광역시	적극적 수동적	1점	1점	4점	5점	사전공개 (정기적)	1점	12
대구광역시	적극적 수동적	5점	4점	3점	2점	사전공개 (정기적)	3점	17
광주광역시	적극적 수동적	4점	5점	3점	2점	사전공개 (정기적)	3점	17
울산광역시	적극적 수동적	1점	4점	3점	2점	사전공개 (정기적)	3점	13
부산광역시	적극적 수동적	1점	5점	3점	2점	사전공개 (정기적)	3점	14
경기도	적극적 수동적	4점	4점	3점	1점	사전공개 (정기적)	3점	15

참여제도1: 정보공개제도

광역시도별 정보공개 종합측정

	정보공개 원칙	청구의 수월성	전자식 공개 기반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규정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사전공개 사후공개	그 외 사항	종합점수
강원도	소극적 수동적	5점	5점	4점	4점	사전공개 (정례적)	3점	21
충청북도	적극적 수동적	4점	5점	4점	3점	사전공개 (완료 후 1개월내)	3점	19
충청남도	적극적 수동적	4점	4점	4점	3점	사전공개 (정기적)	4점	19
전라북도	적극적 수동적	5점	5점	4점	4점	사전공개 (정기적)	3점	21
전라남도	적극적 수동적	5점	5점	4점	5점	사전공개 (정기적)	4점	23
경상북도	적극적 수동적	4점	4점	4점	4점	사전공개 (정기적)	3점	19
경상남도	적극적 수동적	4점	4점	5점	3점	사전공개 (정기적)	4점	19
제주특별자치도	적극적 수동적	4점	5점	4점	5점	사전공개 (정기적)	4점	22

정보제공관련 참여제도 실행(충남도)

주 소	정보제공관련제도							정보제공매체			피드백 방식				총합
	언론	인쇄	교육	동계	출판	제안	신고	대인	정보	전화	이메일	설문	예고	포커스	
1. 기획관리실	○	○	○	○	○	○		○	○					○	10
2. 경제통상실	○	○	○	○	○	○			○	○					10
3. 안전지서행정국	○	○	○	○	○	○		○	○		○			○	11
4. 공무원교육원		○	○	○		○			○						5
5. 문화체육관광부	○	○	○	○	○	○			○						8
6. 농정국	○	○	○	○	○	○		○	○	○					11
7. 농업기술원	○	○	○	○	○	○			○						7
8. 복지보건국	○	○	○	○	○	○			○						9
9. 여성가족정책실	○	○	○	○	○	○			○						7
10. 환경복지국	○	○	○	○	○	○			○						8
11. 보건환경연구원		○	○	○	○	○			○						5
12. 건설교통국	○	○	○	○	○	○		○	○						10
13. 해양수산국	○	○	○	○	○	○			○						8
14. 소방본부	○	○	○	○	○	○		○	○	○					9
15. 홍보협력관실	○	○	○	○	○	○			○						7
16.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	○	○	○	○	○			○						7
17. 감사위원회	○	○	○	○	○	○	○		○				○		9
총 계	15	17	17	17	15	16	1	5	17	3	1	0	1	2	141

정책협의(consultation)에 관련된 법규

시민참여유형	방 법
주민투표(국민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헌법에 규정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제안) 지나치게 많은 조건으로 인해 실용성 의문 지방의회 혹은 국회가 주민들의 입주가 청원할 경우, 법안 혹은 정책사안을 다루도록 하는 규정 존재하지 않음
청원권(rights of pet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우에 청원서를 제출할 권리 시민들이 자신들의 요구 혹은 법안, 조례 등을 제출할 권리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law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부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사전공지를 받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 혹은 규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청회, 사전공지기간 등을 필수사항으로 법 혹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사전준비기간을 규정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s,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결정으로 부터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
규제영향평가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규제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시스템적 평가를 진행할 의무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비용을 줄이기 위한 평가 공공이익을 보호하는데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안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공지 규칙과 공공정책 가이드라인 공공정책 기준 (public policy standards) 지방의회 상임위 오피스만 제도 commissioner 제도 (행정위원회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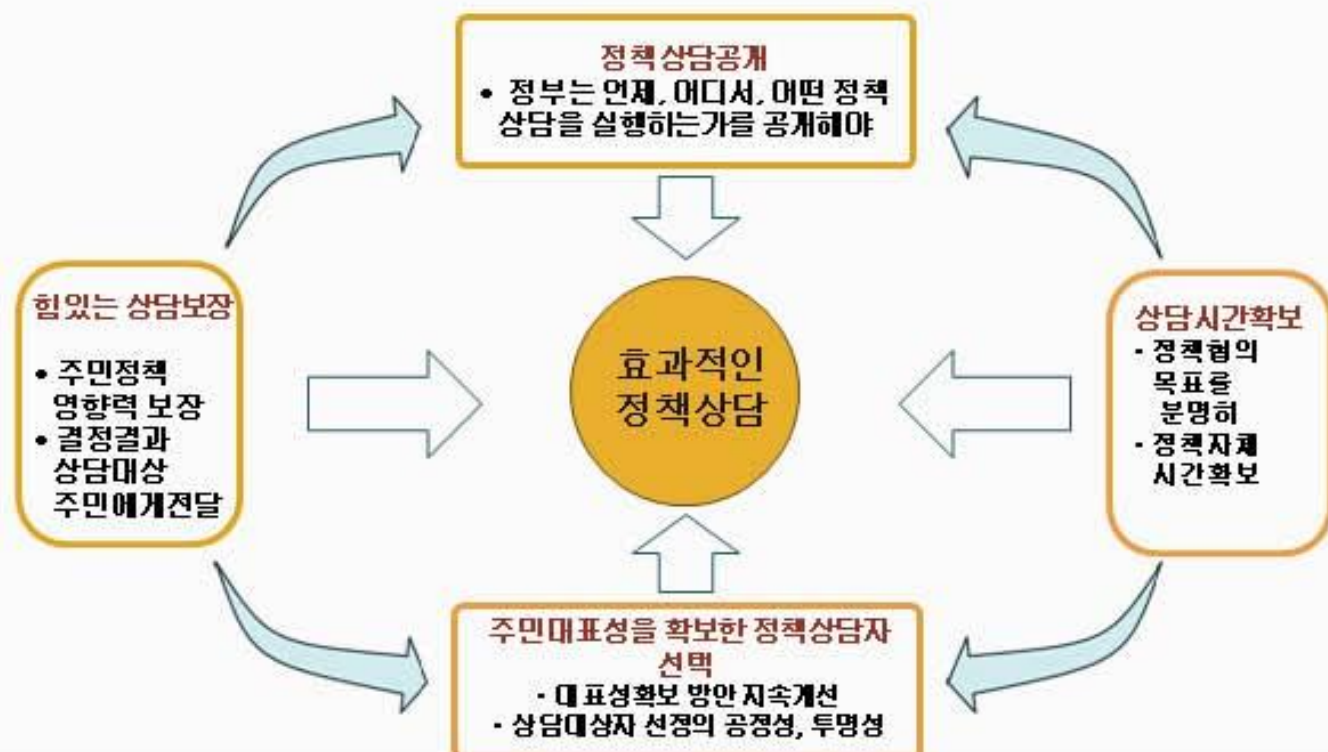
시민과의 다양한 정책상담방식 & 시민참여

적극적주민
 피드백
 적극적주민
 피드백

- 주민제안 박스
- 주민불평불만 민원함
- 주민제안 및 불만 분석 tool
- 주민제안 big-data 분석
- 주민설문 및 공청회
- 주민의견청취 기간 (comment periods)
- toll-free telephone hotline
- Focus group 활용
- Survey 혹은 주민여론조사

주민과의 정책상담 (적극적/지속성)

- 개인의 자문위 참여
- 워크숍, 세미나, 컨퍼런스
- 공청회
- Non-binding referenda(주민투표)
- Open Hours
- 시민패널(citizens' panels)
- 사회그룹에 기초한 자문위원회



정책협의(상담) 수단 (tools for consultation)

수단(tools)		방 법
임시방편적 수단 (ad hoc tools)	공청회 (public hear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사안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시민의견 피드백 방안(feedback) 구체적인 정책제안에 대해, 혹은 실험적 정책제안에 대한 시민반응 탐색 전문가 혹은 일반 시민대상 1차례 혹은 시리즈 공청회 가능 공청회 주관자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지명된 패널, 혹은 이해당사자들이 지명한 패널, 혹은 선술적으로 구성 전문가 프리컨테이션, 패널토론
	포커스 그룹 (focus grou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target group을 대표자들로 부터 제언, 혹은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수단 정부정책제안 혹은 정책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방식 소수규모(10-20명) 혹은 중규모 (200명)
	워크숍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혹은 전문가 프리컨테이션 이해당사자 혹은 일반시민의 의견제언, 코멘트 수집
상시적 정책협의수단 (tools for ongoing consultation)	Open Hours (정부-주민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결정자가 특정시간을 정해 놓고 주민과의 대화 매월 둘째, 며칠 첫째주 월요일 오전 9시 12시, 구청 대강당 주민과의 대화시간 주민들이 규칙적이고 상시적으로 정책결정권자에 대한 접근성 확보
	시민패널 (citizens' pane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권자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시민패널 구성 상시적으로 시민패널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의견(feedback) 확보 규칙적으로 시민일반의 이해를 반영하는 방안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형성과 결정과정에서 특정 이해를 대표하는 그룹의 의견 청취 특정 이슈와 관련된 이해당사자, 전문가, 보편적 이해를 옹호하는 시민단체 등으로 부터 자문 자문위원들은 자신들이 대표하는 그룹과 이슈 가교역할을 담당

충남도 가장 활성화된 위원회 (20개) 현황

위원회의 명	기능	활성화정도	시민참여 (행정/전문가/민간)	비고
1.정책자문위원회	정책자문	최우수	0/98/49 (30%)	열치
2.사회직경계육성위원회	민·관협의	최우수	8/4/6 (33%)	열치
3.도민인권옹호위원회	민·관협의	최우수	3/2/10 (67%)	열치
4.지역미디어 발전위원회	육성,발전대책	최우수	1/6/3 (30%)	열치
5.행정심판위원회	심사 및 평가	최우수	비공개	심사
6.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심의 및 평가	최우수	6/17/6 (21%)	심사
7.인사위원회	심의 및 평가	최우수	5/13/0 (0%)	심사
8.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및 평가	최우수	9/8/0 (0%)	심사
9. 지방제심의위원회	심의 및 평가	최우수	2/25/0 (0%)	심사
10.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평가	최우수	1/29/0 (0%)	심사
11.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평가	최우수	4/26/0 (0%)	심사
12.지방건설기술심의회의	심의 및 평가	최우수	23/134/0 (0%)	심사
13.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및 평가	최우수	2/8/0 (0%)	심사
14.건축위원회	심의 및 평가	최우수	2/66/0 (0%)	심사
15.경관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평가	최우수	2/56/1 (1.7%)	심사
16.광고물관리및디자인	심의 및 평가	최우수	1/9/0 (0%)	심사
17.지방하천관리위원회	협의	최우수	1/19/0 (0%)	심사
18.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	심의 및 평가	최우수	1/37/0 (0%)	심사
19.지방소정심사위원회	심의 및 평가	최우수	비공개	심사
20.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 및 평가	최우수	2/21/0 (0%)	심사
총합	가장 활성화된 위원회의 년 평균 개최실적은 7.8회 수준이고, 예산규모도 월등히 크다			

충남도 민·관 협치적 기능 (부분적)을 가진 위원회 현황 (30/126)

위원회 호	주요 기능	활성화정도 (3년간 개최회수)	시민참여 (당사자 참여율)		
			시민	전체	비중
1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미디어의 발전 및 육성	35	3	10	30
2 다문화정책협의회	다문화가족지원정책	3	2	20	10
3 여성발전위원회	여성정책자문	6	4	20	20
4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 주요시책 심의	3	6	14	43
5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폭력문제해결	20	3	11	27
6 정책자문위원회	주요정책자문	252(예외)	44	147	30
7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편성 주민참여보장	8	40	40	100
8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진흥 및 계획수립	3	0	15	0
9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사회적 경제지원 및 육성	25	6	18	33
10 노사민-정협의회	노사관계안정 및 일자리	4	16	30	53
11 상생단지추진위원회	상생산업단지주요정책협의	4	9	25	36
12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정부-민간, 단체간 갈등조정	3	6	15	40
13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남북기금관리 및 교류협의	3	10	19	53
14 인권증진위원회	인권보호 및 증진	19*	10	15	67

참여제도3: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 평가기준표

참여기구	참여기구운영 평가기준
1. 참여예산위원회	예산위원회와 구의대표팀 (선거구별비율) 예산위원 중의회의 추천자와 단체장 추천자가 차지하는 비율 예산위원의 규모 예산위원회 회의(회의의 정기화, 빈도) 보좌위원회의 운영 여부
2. 참여예산연구회	예산연구회의 독자성 예산연구회의 전문성 수준 예산연구회의 기능과 역할
3. 참여예산협의회 (참여예산조정협의회)	영세집약단체에게 제출하기 전에 보충적으로 예산조정이 참여예산협의체를 거치게 되는가? 예산협의회의 운영 여부
4. 예산학교	예산학교의 정기성 예산학교 수강인원 규모 예산학교 좌표현상과 사례의 다양 여부
5. 지역회의	지역회의의 운영 여부 지역회의와 예산위원회의 연계성 지역회의를 통한 예산제안성
6. 여론수렴 제도	여론수렴방법의 다양성 및 투명성 여론수렴방법에 서구적 참여수준 여론조사와 정기화 및 규모
7. 참여예산일정	참여예산일정의 순보조 합치 참여예산일정의 명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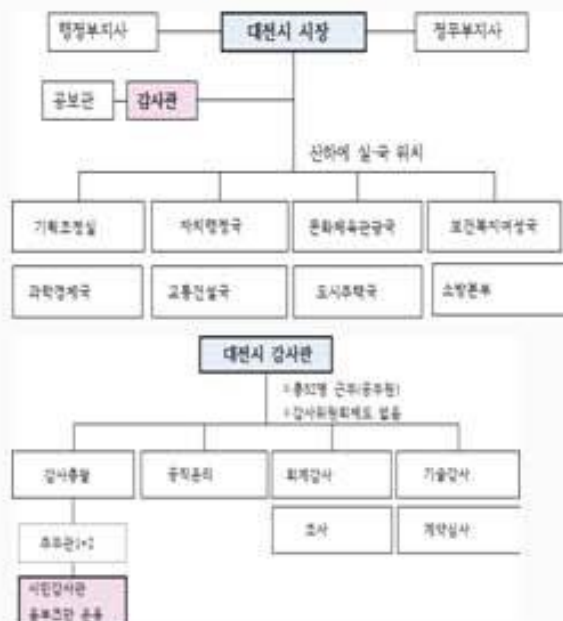
대전시 시민감사관제 운용과 평가(2017)

대분류 항목	소분류 항목	비고
감사관제 제도 운영	1.1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존재여부 - 시민감사	없음(감사관제)
	1.2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조항 존재여부	존재
	1.3 지방공기업이 시민감사관 대상여부	규정 없음
	1.4 감사위원회의 상근여부 (시민감사관 상근여부)	없음(시민감사관-임시고용)
	1.5 시민감사관 제도의 상설화(행정전문직화)	없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2.1 단체장 직속기구도 운영	직속기구
	2.2 의회 내 설치운영	의회와 무관
	2.3 감사위원회 위원 공개채용 (시민감사관, 음부조만 공개)	감사관-공무원 시민감사관-공개채용-겸함제한
	2.4 감사위원회의 의회승인	승인 불필요
	2.5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보장	임기보장
감사위원회의 실효성 확보 (시민감사관제의 실효성)	3.1 감사위원회의 조사권 확보여부	없음
	3.2 위원의 정책특권 확보	없음
	3.3 위원의 기소권 확보	없음
	3.4 위원의 언론보도권 확보	없음
	3.5 위원의 의회보고권 확보	없음
	3.6 위원의 권고권	없음

대전시 vs 서울시 시민감사관제 운용비교(2017)

대분류 항목	소분류 항목	대전시	서울시
시민감사관제 지위 & 역할	1.1 단체장 직속기구도 운영여부	감사관실 내의 임의기구	독립된 직속기구
	1.2 시민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여부	임의적 지위(감사관실 부속)	감사위원회로부터 독립된 기구
	1.3 시민감사위원회 의무설치 조항 존재여부	존재	존재
	1.4 지방공기업이 시민감사관 대상여부	규정 없음	대상(행정기관, 자치구) (시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1.5 감사위원회의 상근여부	없음(시민감사관-임시고용-10일)	상근(임기3년보장)
	1.6 시민감사관 제도의 상설화(행정전문직화)	없음	상설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2.1 조례나 규칙에 독립성 명시여부	임시	별개의 조례존재
	2.2 시민감사위원회 운영: 합의제 vs 독임제	독임제(단체장 개입가능)	합의제(단체장 개입불가)
	2.3 시민감사위원회 위원 공개채용	공개채용	공개채용(감사원근무, 국회보좌관, 시민단체활동가)
	2.4 시민감사위원회 전문성(자격과 경력)	전문성 미확보(30명 혹은 사안별)	전문성 확보(6-8명)-7명 이내
	2.5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보장	사안별 임기	4년 임기보장
감사위원회의 실효성 확보 (효과성)	3.1 감사위원회의 조사권 확보여부	없음	있음(조사권 4개)
	3.2 시민감사위원회의 독자적 행정	없음(담당 직원주무관 2명)	31명의 공무원이 지행
	3.3 감사대상 선정, 자도요구권, 결과 조치권한	없음	있음(시사업발주, 위탁사업, 보조금 사업, 공공기관사업)
	3.4 시민의 감사청구와 주민감사청구권	권한 없음	조사대상(공공사업1000여개) 시민의 감사청구권을 지속적으로 확대
	3.5 감사활동의 언론 보도권 및 공개	없음	있음
	3.6 위원의 권고권	없음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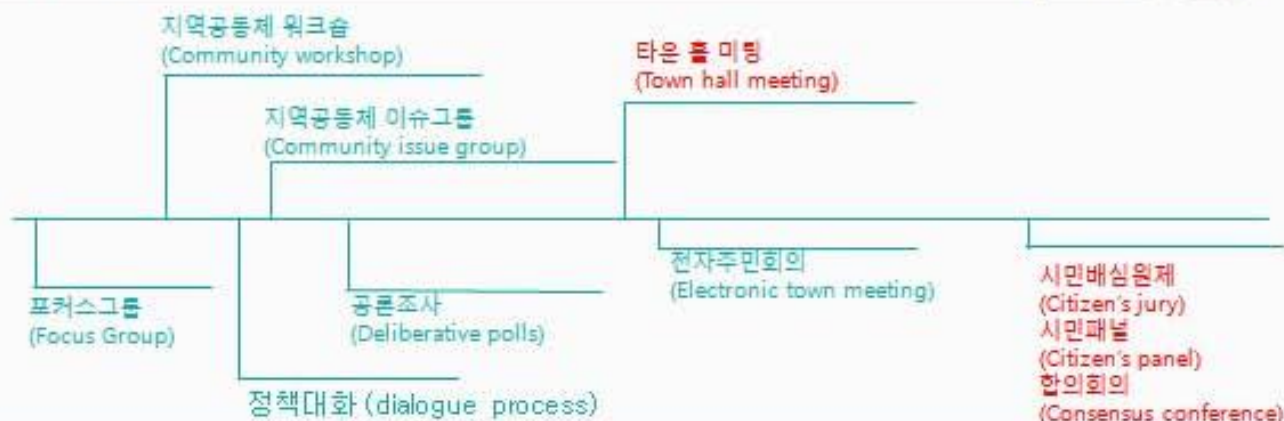
시민감사관의 지위와 역할 비교 (대전시 VS 서울시)



공동정책결정수단 (토의수준 & 시민판단 활용)

낮은 수준의 토의
(low level deliberation)

높은 수준의 토의
(high level deliberation)



낮은 수준의 시민판단 활용

높은 수준의 시민판단 활용



정책결정에의 능동적 참여수단(주민참여 & 공동결정)

참여수단	제도의 특징	결정 구속력 수준
시민포라 (citizens' fo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제널력 선격, 지속적인 정책협의의 가능 • 일반시민 혹은 시민단체들이 정책제안들을 직접적으로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는 수단 	★★
정책대화 (dialogue proc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당사자들의 욕구 혹은 수호를 이해 • 사회적 대화(목구이해, 정책환경파악)-정책적 대화(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의견) • 이해당사자(빈곤가정)-결사체(복지시험의회)-정책결정권자 	★★
21세기타운홀미팅 (21C town hall mee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운홀미팅+IT기술+모든 및 숙의+공동결정 • 정책결정 영향력 비중이 높은 정책사안 대상-전체타운의 관심유도 • 참석자 무작위 축출-정보사전제공-전문가 패널 프리젠테이션-질의응답-레이블로몬-기초결정 투표-레이블 모은-합의수준의 확대 	★★★
전자공동결정회의 (on-line decision-making confer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기술+모든 및 숙의+공동결정, 협의 및 숙의 	★★★
합의회의 (consensus conferen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를 전제로 한 협의회의 • 구성요소: 소규모 이해당사자 대표자회의(인구통계학적 대표자 구성), 높은 수준의 정보공유, 전문가 패널구성, 장기간 복잡한 이슈들에 대한 협의과정, 질의(일반인)와 답변(전문가), 정책결정에 대한 리포트 작성 	★★★
시민배심원 (citizens' ju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를 통한 주민주도적 의사결정방식 • 재판과정과 유사하게 진행-심사숙의-공개-정책 추천 제안서 작성- • 배심원 결정의 구속력 보장 	★★★★★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 숙의적 여론조사

공론조사 구성절차



일본 에너지·환경에 대한 공론조사 과정(후쿠시마 사고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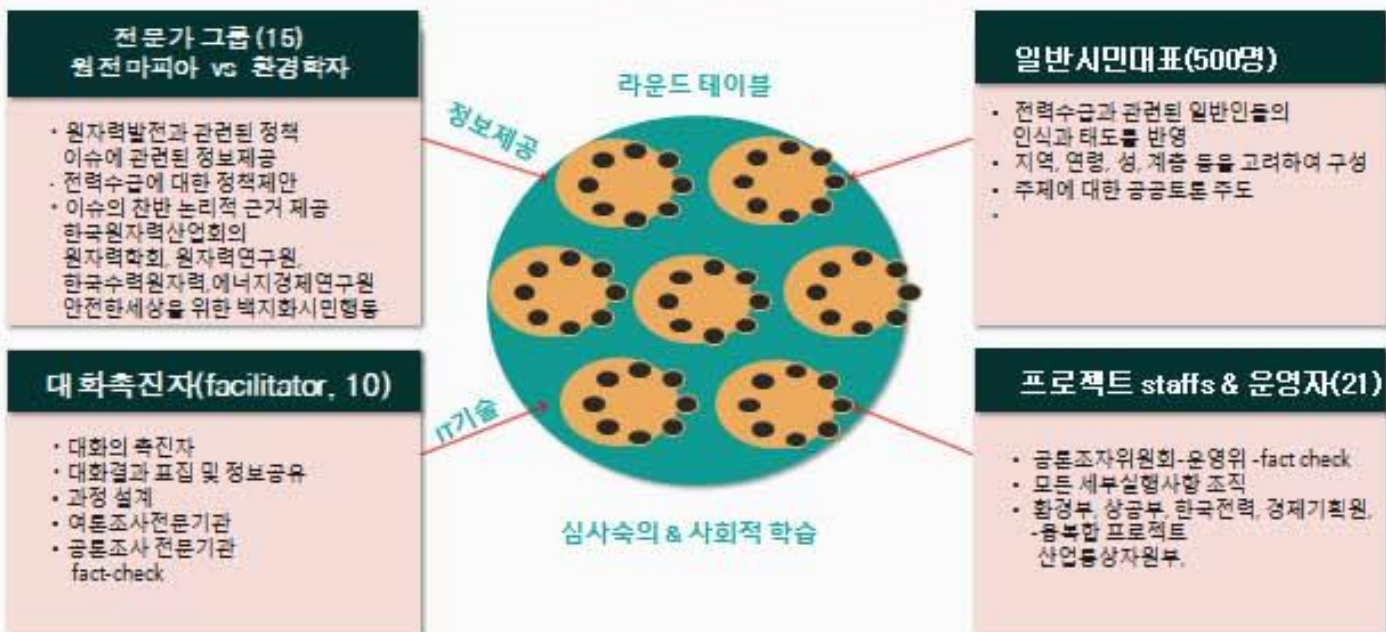


신고리 5.6호기 숙의적 여론조사의 진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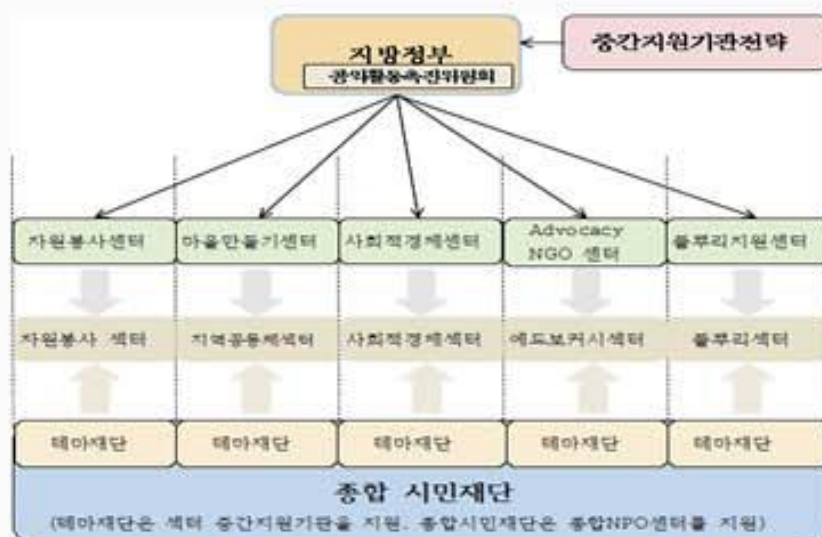
공론화 조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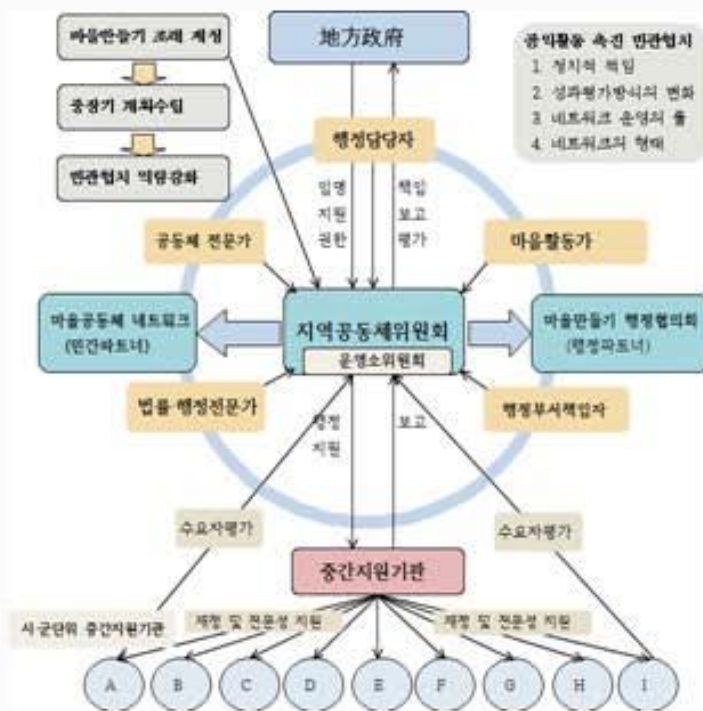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의 실례: 한국전력수급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



주요 사회섹터 별 공익활동지원전략





34

민관협치를 구성하는 6가지 필수적 요소

- 7 광역-기초단위 민관협치 시스템구축
- 6 중장기계획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 5 중간지원기관(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 4 민간파트너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 3 행정협의회 (마을만들기행정지원협의회)
- 2 거버넌스 위원회(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 1 조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거버넌스 위원회 구성 : 민·관 네트워크 구조화 전략

- 1 누가 네트워크 관리의 주체가 될 것인가?
- 2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누구로 할 것인가?
- 3 네트워크의 형태는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
- 4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며 이해관계자간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 5 어떤 참여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 6 어떤 분야의 정책에 참여시킬 것인가?
- 7 어떤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가? (정책형성단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형성 및 변화시키는 전략으로서, 거버넌스에 관여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의존성 및 관계, 이들을 가이드 하는 규칙

중간지원기관의 기능과 역할: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1. 연구와 정보수집
기초자료 확보
- 다양한 기초 자료 DB 구축
 - 정보공유를 통한 코디네이터
 - 시민참여에 대한 과학적 분석 확보

1. 초기 마을조사과정
(마을역사, 문화 등)
2. 활동가교육
3. 주민교육 과정

3. 인적자원관리 및 조직발전
- 기술적 능력 및 조직적 능력 배가
 - 이슈에 대한 공동의 이해
 - 조직 전문성 지원
 - 활동가 교육 및 양성

2. 연대와 네트워킹
제도에 활용
- 공동행동을 위한 행동 코디네이터
 - 이슈공유 및 합의 도출
 - 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 섹터에 이슈네트워크

5. 교량역할
- 섹터 간의 관점과 전달
 - 정부-기업-시민사회 간의 교량역할
 - 국제교류
 - 공동의 이익에 대한 등

4. 재정지원 및 사업지원
- 사업계획의 수립
 - 기금모금과 분배
 - 섹터 간의 매개자
 - 지원기관 간의 네트워킹



통치하는 것과 통치 받는 것은 민주주의의 양면이다
다
협치는 이 양면에 참여하고 이를 이해하는 일이다

